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리영희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평화사상가이다. 이 글은 선생의 일생을 '평화주의' 관점에서 반추하여 그의 사상이 오늘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선생의 평화사상은 반핵 평화주의,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 이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남북 화해는 물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군축을 제안하였다. 또 선생은 통일의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 자주적 태도, 민주주의 공고화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가 소극적·적극적 평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성격임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리영희, 반전반핵, 분단체제, 평화체제, 통일, 동맹.

I. 들어가는 말

고 리영희(1929.12.2~2010.12.5) 선생은 언론인이자 국제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면모를 띠며 한국 현대사를 증언해왔다. 그 과정에서 선생은 시대의 요구와 씨름하며 날카로운 지적 탐구를 전개하는 한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7).

편, 민족과 민중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혜안도 보여주었다. 이 글은 선생의 일생을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반추하여 그의 평화사상을 발견하고 오늘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리영희 선생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고 ‘실천적 지성’으로서 남긴 유산이 방대하므로 그에 대한 평가를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간 선생의 저작을 묶어 2006년 한길사가 ‘리영희 저작집’ 시리즈로 출간해 오늘날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일대기를 통해 교훈을 얻는 작업이 이루어져왔고,¹⁾ 선생의 다양하고 풍부한 지적 자산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해석하고 시사점을 찾으려는 공동작업도 이어지고 있다.²⁾ 이런 다양한 해석과 재생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사유와 실천을 하나로 묶는다면 언론의 자유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면서 평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선생의 평화사상을 찾아보는 것은 단순한 지적 흥미가 아니라 절실한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출간물에서 선생의 평화 관련 저작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미흡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리영희 선생이 냉전기와 데탕트, 그리고 탈냉전기를 망라하며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를 넘나들며 한반도 안팎의 전쟁과 평화 관련 정세를 평론하고 대안을 궁구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의 평화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평가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문에서는 선생의 평화사상을 먼저 시대적 배경이 준 영향을 더듬어 보고(Ⅱ장), 평화사상과 통일사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

1) 김삼웅, 『리영희 평전』 (서울: 책보세, 2010); 강준만 편저, 『리영희: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서울: 개마고원, 2004).

2) 고병권·구갑우 외, 『리영희를 함께 읽다』 (파주: 창비, 2017); 홍세화·고병권 외, 『리영희 프리즘』 (파주: 사계절, 2010).

다. 평화사상(Ⅲ장)은 반핵 평화주의론,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론으로 소절을 만들어 살펴보고, 통일사상(Ⅳ장)은 통일의 조건, 방안, 방향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맺음말에서는 그의 평화사상이 오늘 한국인들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시대적 배경

리영희 선생의 인생은 그의 생애 시간과 행적, 두 측면에서 한국현대사를 잘 드러내준다.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기,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냉전 해체와 세계화 등등. 여기서는 지면 제약상 선생의 사상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성세대를 30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는 30대를 ‘이립(而立)’이라고 해서 마음이 확고해져 움직이지 않다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30대에 들어선 1960년대 초까지 리영희의 경험은 이후 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정치·역사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권 상실기에 태어난 리영희는 고향 평안북도 삭주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살다가 1942년 경성공립공업학교에 진학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이 집안의 경제 사정으로 제약을 받은 터였다. 당시 모든 학생들은 학도병이 아니면 근로동원을 나갔다. 리영희도 근로동원에 나섰는데 1945년 초, 선생은 학도근로단 통솔 반장인 경성전기 전기공 최○남으로부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전과 종전의 임박함을 들었다. 최 반장은 “조선이 해방되는 날이 머지않았어. 미국·영국·소련이 그렇게 공약했으니까.” 하며 알타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 소식을 들으며 리영희는 민족의식을 싹틔었다고 회고하였다.³⁾

해방의 기쁨은 겨레 모두에게 한가지였지만 민족 분단의 서막이 올랐다. 청년 리영희는 학업성적이 좋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일반대학에 가지 못하고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에 입학한다. 3학년이 된 1948년 3월 승선 실습이 시작되어 그해 가을 상해행 준비지시가 전달되었지만 중국 내전이 격화되어 취소되었다. 그 후 10월 말경 부산항에서 소금 1천 톤을 싣고 인천으로 갈 배를 타고 거제도를 지날 때 긴급 회항 무선지시를 받았다.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리영희는 여수항을 입항하려던 천안호 “갑판 위에 반란군의 사격의 사각을 이루는 철제 돌출물들 뒤에 숨어 철모를 쓰고 구경을 했다.” 그리고 진압군 지휘관의 명령대로 선장과 1등 항해사를 도우면서 선내와 갑판 위를 뛰어다니기도 했다. 선생은 이 사건을 “동쪽끼리의 총질”이라고 하면서 전투가 끝난 뒤 “인생 처음으로, 뜻하지 않은 와중에 내던져진 동족상잔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⁴⁾

분단이 짙어갈 무렵 민족지도자들의 죽음은 겨레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1949년 6월 어느 날 김구 선생의 사망은 리영희에게 충격으로 다가갔다. 40년이 지나서도 당시 추도가 가사와 곡을 잊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면 백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컸다고 그 스스로 말한다. 이 북에서 월남한 입장의 그 나이의 자신으로서 김구 선생의 민족애와 애국심 그리고 정의감이 그의 사상과 염원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대학 시절 그는 내성적이었고 지역감정을 분열적인 것으로 싫어하고 멸시했다고 말한다. 선생은 그것을 김구 선생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현실적 사회생활에서의 손해를 자위하며 감수했다고 말한다.⁵⁾

3) 리영희, 『역정: 나의 청년시대』 (파주: 한길사, 2006), pp. 105~109.

4) 위의 책, pp. 139~147.

5) 위의 책, pp. 151~153.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3월 리영희 선생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안동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전쟁이 나서는 육군 유엔군 연락장교단 후보생 교육을 받고 통역장교 일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에 통역장교로 뛰어들어 농민들과 대화하는 모험심과 정의감에 불타기도 했지만 죽음 가까이 가보기도 했다. 그에 앞서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말살 행위”로 당신이 부른 ‘국민방위군’ 사건을 직접 목도하면서 “단테의 연옥도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는 없었다.”고 소름 끼쳐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선생은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혀 이웃과 겨레를 죽이는 야만과 비이성을 멀리 하게 되었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국가, 지도자, 직업군인, 일제 강점기의 ‘지원병’ 출신 국군장교, 화려한 ‘애국·반공’ 구호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부패와 부정, 전쟁 속에서 치부하고 영달하는 자들과 입장성이만골고(一將成而萬骨枯)로 죽어야 하는 많은 힘없는 백성들의 처지”였다.⁶⁾

국민방위군 사건에 이어 1951년 2월 10-11일에 리영희가 소속된 연대의 3대대가 관여한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피해 규모가 축소되었고 학살 사유가 은폐·거짓 보고되었다. 리영희 자신은 1982년까지 학살 규모(719명)를 187명으로 알고 있었다고 부끄러워했고, ‘빨갱이’라는 이유로 젓먹이, 어린이, 노인 등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잔인성에 괴로워했다.⁷⁾ 그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은 다음과 같은 성찰과 결단을 거쳐 평화주의로 승화해나간다.

이 나라에서는 인간 말살의 범죄가 ‘공비’나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이처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 후부터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 이

6) 위의 책, pp. 168-202.

7) 위의 책, pp. 217-223.

것은 내가 이데올로기의 광신 사상과 휴머니즘에 대한 멸시를 깨쳐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⁸⁾

전화 속에서 리영희의 군대 생활은 7년 동안 흘러갔다. 선생은 대한민국 군대가 인간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 ‘근원적으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사회였다고 회고하면서 군사주의를 경계했다. 또 전쟁 기간의 군대사회는 일본 군대식의 야만적인 폭력이 어디서나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쟁이 빚어낸 군사주의 문화를 폭로하기도 했다.⁹⁾ 전쟁이 끝났지만 부패와 우상화로 물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선생은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회의하고 ... 진실된 가치를 밝혀내어, 진실 이외의 그 무엇에 대해서도 충성을 거부하는 종교 같은 신념”을 만들어갔다.¹⁰⁾

한편, 리영희에게 미국은 양가적인 것처럼 보인다. 영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가 통역장교를 하고 훗날 언론인으로서, 특히 외신 보도에 전념한 것에는 미국에 대한 관심도 작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처음 언론에 발을 들인 <연합통신>에서 외신을 담당하고, 기회가 생겨 미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실감한 동시에 미국식 자본주의의 비인간성과 백인우월주의에는 실망했다. 선생은 또 5·16 쿠데타 등 한국정치 개입과 분단에 관한 미국의 책임을 언론활동과 연구를 하며 깨달아갔다.¹¹⁾

그런 가운데 리영희 선생은 3·15부정선거,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각에서 보도하면서 한

8) 위의 책, p. 225.

9) 위의 책, p. 279.

10) 리영희, 『분단을 넘어서』 (서울: 한길사, 1984), p. 312; 강준만 편저, 『리영희』, p. 46에서 재인용.

11) 리영희, 대담 임현영,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파주: 한길사, 2005), pp. 260~263.

유명한 미국 언론과 ‘접속’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미국 시민사회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 특히, 5·16쿠데타 직후 워싱턴에서 가진 박정희-케네디 회담에 대한 특종기사는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정권안보 외교가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알린 쾌거인 동시에 ‘자유인’ 리영희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한 사건이기도 했다.¹²⁾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여론을 조작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국민을 통제·동원하고자 했다. 1964년 10월 <조선일보>로 옮긴 리영희는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취재하며 ‘남북한 가입 제안 준비’(11.21)라는 제하의 기사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그의 첫 필화사건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외상회의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 기사였는데, 이것이 유엔 총회에 남한만을 초청해 ‘코리아 문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온 미국의 관행을 이용해 체제우월의식을 주입한 박정권의 통치방식에 반한 것으로 간주됐다. 풀려난 리영희가 박정권의 베트남 파병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1966년 가을 중앙정보부는 리영희에게 후한 조건으로 정부 입장에 맞는 현지 취재기사를 요청했다. 야당 대표가 베트남 파병에 찬사를 보내는 시절에 선생은 그 유혹을 물리쳤다.¹³⁾ 진실과 자유를 향한 그의 투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¹²⁾ 리영희, 『역정』, pp. 341~434. 기자 리영희가 케네디-박정희 회담을 기획·추진한 국무성 고위관리를 만나 취재한 결과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에 조속한 민정이양, 그에 앞선 군의 정치관여 금지 및 원대복귀, 경제원조 집행 연기, 군사원조 잠정 동결 등을 언급하며 박 의장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리영희 기자는 이를 워싱턴발 1961년 11월 15일자 기사로 타전했다. 그 파장으로 리영희는 박의장 일행 인사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본사로부터 긴급귀국 통지를 받았다. 리영희, 임현영 대담, 『대화』, pp. 275~280; 리영희, 『역정』, pp. 435~443.

¹³⁾ 강준만, 『리영희』, pp. 76~81.

Ⅲ. 평화사상

1. 반핵 평화주의론

1977년 11월 11일 새벽에 이리역 대폭발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요원의 작동 실수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공업용 화약 60톤이 촛불에서 나는 감지할까말까 할 열기에 감응하는 순간 이리시의 70%가 하늘과 땅으로 사라져버렸다. 리영희 선생은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리시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는 TNT는 60톤이 필요했는데, 핵폭탄이었다면 3그램짜리면 충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리시의 TNT 폭발과 핵무기 폭발 사이에 인간적 과오, 실수라는 끔찍한 유사성이 있다고 선생은 갈파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¹⁴⁾

이어 선생은 핵으로 인한 불행이 소련에서만 발생할 까닭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핵원료 누출사고를 언급한 뒤 한국에서 ‘사무삼과(四無三過)’에 빠진 국민의식을 질타하였다. 사무는 핵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민족적이란 뜻이고, 삼과는 핵에 대해서 인간이성을 과신하고, 기계의 정밀성을 과신하고 또 군사력을 과신한다는 말이다.

선생은 그 중 무민족성과 관련해서 체르노빌 핵유출 사고를 다룬 서울의 유명 신문의 네컷 만화가 그 핵유출이 북한에 일어나도록 기원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동포애도 없고 민족적 감정도 없다고 말한다. 그것을 광신적 반공주의 교육과 선전의 탓으로 돌린 선생은 우리에게 미국만 있고 민

¹⁴⁾ 리영희,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리영희·임재경 편,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반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8), pp. 265-266.

죽은 없다고 개탄한다. 또 인간이성,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성과 호의에 대한 과신과 관련해서는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한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선생은 “군사력 과신병이 반도의 남북 간의 가능한 평화를 얼마나 방해했고 또 지연시켜왔는가!”고 한탄한다.

“남한에 있는 미국군대의 각급 사령관들은 남한을 세계에서 제일 이상적인 군사훈련장으로 확신하고 있다. …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무제한 사격지역’, 휴전선 북쪽에 있는 사격목표로 가장 이상적인 살아있는 인간표적. 그뿐이 아니다. 남한은 지구상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 땅을 쓰는 임대료조차 달라고 하지 않는 유일한 국민이다.”¹⁵⁾

리영희 선생은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맹목적 신앙심’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핵에 관해 무지한 태도와 상관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선생은 한국인들이 핵에 무지하게 된 원인을 민족 내부문제의 군사적 해결정책,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 핵무기의 위험성과 핵전쟁의 종말성에 대한 무지, 군대와 군사력 숭배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의 성격상 반평화적이되 미국 국익 위주의 사고방식, 외국의 핵기지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착오 등 5가지를 꼽았다.¹⁶⁾

이상과 같이 리영희 선생은 핵문제에 관한 기본 시각을 표명하고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과 같은 핵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가 핵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선생은 1960-70년대는 미소간 ‘공포의 균형’이 핵전쟁 발발을 억제해왔다면, 1980년대 들어서는 레이건 정부의 핵우위전략, 동시다발전쟁론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미국방장관 와인버거의 ‘83년 국방보고서’와 한미 ‘팀스피리트83’ 작전 등으

15) 위의 글, p. 272.

16) 리영희, 『역설의 변증』 (파주: 한길사, 2006), pp. 132~135.

로 지적하고, 그것이 미국의 자의적·독단적 핵무기 발사를 견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핵자문위원회나 서독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 오르가코프 소련 육군참모총장의 발언, 그리고 소련 관영 〈타스통신〉 보도 등을 예로 들면서 미소 대결이 아닌 제3의 경우, 곧 일본과 소련의 군사분쟁으로 한반도가 핵전장화 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¹⁷⁾ 또 리영희에 따르면, 미 군사평론가 잭 앤더슨은 레이건 미 대통령이 중성자탄 생산을 명령한 1981년에 미 국방성은 남한을 그 저장소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1983년 방한한 마이어 미 육군 참모총장은 “레이건 정부의 기본적 전략개념은 재래식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 개념은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는 1987년 현재 남한에 4만 명의 미국 군대와 약 200여기로 추정되는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다는 9개의 미 고위 관리 발언과 언론보도를 인용한 선생의 분석으로 뒷받침된다.¹⁸⁾

실제 냉전 해체 상황에서도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군사위기’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핵개발 계획, 미국의 위기의식 조성, 한국 군부 책임자의 선제공습공격 의사 표명 등으로 인해 절정에 달했다. 그 가운데 북한의 핵 개발 위협보다는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 더 컸다는 것이 리영희 선생의 판단이다. 선생은 1945년 미국의 일본 핵폭탄 투하 이후 35년 사이 미국 군부가 핵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구상·협박 또는 준비한 일이 26회 있었는데 그 중 한반도가 핵폭탄 사용 목표로 정해졌던 것이 5회나 된다고 고발했다.¹⁹⁾ 이어 선생은 1991년 4월 12일, 이종구 국방장관의 북

17) 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파주: 2006, 한길사), pp. 286, 288~289, 290.

18) 리영희, “한반도의 전쟁 위협과 동북아의 평화,” 『역설의 변증』, p. 116~117; 105.

19)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파주: 한길사, 2006), pp. 26~27, 31.

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기습 공격구상 공개발언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미 군부가 의회에 제출한 〈1991년 종합 합동군사정세 평가〉 보고서, 체니 국방장관, 솔로몬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리스카시 주한미군 사령관, 칼 포드 국방부 제1부차관보, 파월 합동참모부장 등의 발언을 소개 분석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²⁰⁾

이런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한겨레의 대응책으로 선생은 첫째, 새로운 정황에는 새로운 이념과 가치관, 즉 화해와 평화가 요구되고, 둘째, 분단민족을 뒷받침하는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지향성에 맞서 남·북 단위의 반(半)민족주의가 아니라 대민족주의가 요구되고, 셋째, 언론의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는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²¹⁾ 특히, 선생은 한반도에서 반전반핵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균형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한 후 “복안적 원근법 속에 미국의 정책과 전략을 넣고 보자”고 제안한다.²²⁾

2.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리영희 선생이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을 언급한 적은 없다. 이 용어는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면서, 한반도 분단체제가 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분열구조(혹은 냉전구조)의 하위 구성 부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분석틀이다.²³⁾ 다시 말해 세계 안보질서와 달리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

20) 위의 글, pp. 28~30.

21) 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pp. 292~293.

22)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 90.

23)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2호 (2006), pp. 5~50;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파주: 한길사, 2009); 정영신, “동아시아 분단체제와 안보

도 안보질서는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리영희 선생의 한반도 분단·휴전체제와 동아시아 냉전구조는 동아시아/한반도 분단체제론과 다를 바 없고, 이후 명명된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의 지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리영희 선생은 서슬 퍼런 반공독재체제 하에서 한반도 분단·휴전체제를 동아시아 비평화의 맥락, 즉 동아시아 분단체제 담론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낸 최초의 학자이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체제의 특이성은 남한 군대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직접 지휘권 하에 있는 독립적 국가방위 및 안전보장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밝힌 지 오래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군 작전지휘권이 미국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권리가 이양된 지 오래다. 주한 미공군은 일본 요코다에 사령부를 둔 미 제5공군에 속한다. 제5공군은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일본 영토와 주변 공군을 통솔하고 있다. 제5공군이 주축이 된 동북아 공군 지휘체제는 일본군 공군과 한국 공군을 사실상 통합된 지휘체통에 편입하고 있다는 규명은 종합적인 사실 규명에 바탕을 둔 그의 평화론의 일부에 불과하다.²⁴⁾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군의 형태를 띠고 위계적인 지휘편제를 형성한 것을 공론화한 것도 리영희 선생이다.²⁵⁾

선생은 닉슨독트린이 미국의 베트남전 지속에 대한 부담,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보다 적

분업구조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94권 (2012), pp. 5~48; 백원담,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²⁴⁾ 리영희, 『역설의 변증』, pp. 112~113.

²⁵⁾ 한국과 미국은 1972년 닉슨독트린의 발동으로 수도 북방 중서부전선에 배치된 한국군 1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을 그 전역에 배치된 미국군과 합쳐서 제1군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978년 카터 대통령 재임시 전체 한국 군사력을 주한미군 제8군사령관의 지휘권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개편·창설했다. 위의 글, pp. 113~114.

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림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한국이 종속적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조치임을 미국과 일본의 각종 외교문서와 관련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종합 검토해 규명한 바 있다. 그에 바탕을 두고 선생은 남북한 쌍방이 그 배후의 강대국들과 형성하는 군사 공동체제 때문에 남북한 민족이 스스로 긴장을 완화하지 않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7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²⁶⁾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의 형성과 남북한 긴장의 상관관계를 적확하게 드러낸 분석이다.

리영희 선생은 동아시아 분단체제, 곧 두 블록 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하나의 사례분석이나 특정 이론의 규명 차원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후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한일국교 정상화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분석한 후 1970년대 한·미·일 안보관계를 1960년대부터 확립되어 온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맥락에서 분석한 것은 그 대표적인 연구사례이다.

197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것이다. 리 선생의 분석에 따르면, 닉슨의 아시아 정책은 ① 월남전쟁 종결을 위해 종래의 월남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② 아시아 국가들의 자주국방 강화로 미국의 부담을 축소하고, ③ 아시아 우방국가들의 집단협력체제 강화에 일본의 지도적 공헌을 증대하고, ④ 중공과의 접촉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는 미국의 한국 안보 책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것을 말하고, 이는 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과 거기에 한국이 편입됨을 의미한다. 선생은 1970년의 현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한 1964년 길 패트릭 미

26)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파주: 한길사, 2006), pp. 504-545.

국방차관의 구상대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²⁷⁾ 5년 후 닉슨-사토오 미일 공동성명(1969.11.17) 발표 직후 가진 사토오 일본 수상에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은 패트릭 구상이 구현된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군대가 일본 국내의 시설·지역을 전쟁 작전행동의 발진기지로 이용해야 할 사태가 생기면 일본정부는 (미국의) 사전협의를 긍정적이고도 재빠른 태도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²⁸⁾

1980년대 동아시아 분단체제는 무한 군비경쟁으로 그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이 리영희의 분석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경쟁이 가속화 되어 미소는 동맹국가들의 영토를 기지로 삼는 중거리핵미사일 경쟁을 전개하고, 특히 미 레이건 정부는 우주공간으로 핵군비경쟁을 확대시켜 소련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약화시키려 하였다. 일본 군사대국화²⁹⁾와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지향성도 뚜렷해진다. 선생은 이러한 군비경쟁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자신의 동맹국가들에게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한다. 아래 화살표로 이어진 서술은 리영희 선생이 만든, 두 핵강대국의 군비경쟁이 동맹국들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들이다. 소련 군사력 우위(설) → 전쟁 분위기 고조 → 동맹국들의 군사력 증강 경쟁 → 소련의 무제한 군비강화 대응 → 전 세계적 규모의 군비경

27) 패트릭 구상은 한일국교정상화로 한반도 분쟁시 일본의 개입이 가능해져 미 지상군 증강 없이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발상이다. 패트릭의 발언은 『世界週報』, 1964년 5월 7일자;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1974)』 (파주: 한길사, 2006), p. 249에서 재인용.

28)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pp. 265.

29) 일본은 자위대 창설 3년 후인 1957년부터 5개년 군비증강 계획을 5차례 거듭하고, 1983년도 군사 예산을 국민총생산(GNP) 1% 이하 제한선을 깨고 1.19%로 증대한다. 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p. 275.

쟁 가열화 → 모든 국가 사회의 군대식 사고방식·가치관 지배 → 군부 지배적 국가이념화 → 평화·인권·민주주의 애호정신의 질식 → 무력·전쟁 숭상 기풍 →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무장·이해관계 해결 유혹 → 국지적 핵전쟁 → 전면 핵전쟁 → 인류 말살³⁰⁾

1980년대 들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선생은 1983년 1월 22일 서울을 방문한 미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 대장의 발언을 그 근거로 꼽는다. 마이어 대장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군사협력체제가 동북아시아의 방위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3국 간의 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 부담을 줄이며 군사적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한일관계는 50년대 백지상태에서 60년대의 정치관계, 70년대의 경제관계, 80년대의 군사관계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90년대 입법화 단계, 즉 법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리 선생의 진단이다.³¹⁾ 실제 1990년대 냉전 해체의 순풍이 동북아에서도 부는 것 같았지만 대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소련 해체로 미중 협력관계가 약화되고 대신 미일 안보협력이 증대되었다. 한반도는 일시 대화 후 북핵위기를 거치면서 긴장상태가 가시지 않았다. 선생은 이를 “제로섬’적 대결 구조”라고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전환과 비생산적인 군사통치체제의 청산을 위해서 군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³²⁾

3. 한반도 평화체제론

동아시아 분단체제에 관한 리영희 선생의 분석은 한반도 분단·휴전

30) 위의 글, p. 273.

31) 위의 글, pp. 279, 281.

32)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270~275.

체제로 이어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토대가 된다. 분단·휴전체제는 논리적으로는 통일·평화체제의 대립항이고 현실적으로는 통일·평화체제의 기원이다.³³⁾ 여기서는 통일·평화체제를 나누어 통일문제는 뒤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평화체제를 다루고자 한다.

평화체제에 있어서 평화는 평화의 보호를 의미하는데, 평화의 보호는 평화유지와 평화회복으로 이루어진다. 평화유지와 관련한 조치로는 안전보장조약, 불가침조약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 구소련 및 중국과 안보조약을 맺었다. 물론 오늘날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맺은 안보조약의 효용성은 의문을 받고 있다. 또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불가침을 공약하였고 이후 불가침 부속합의서도 채택했지만(1992.9.17), 법적 구속력은 물론 실질적인 의미도 갖지 못했다. 한편, 평화회복과 관련해서는 휴전조약과 평화조약 등이 있다. 유엔 헌장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평화보호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 관련 당사자들이 맺은 휴전협정은 한국전쟁을 일시 중단시켰지만 평화조약(혹은 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상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반도 평화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상하였는가?

리영희 선생의 평화체제론은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양자관계의 조합, 즉 한미, 북미, 남북관계의 틀에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실제 선생의 논의에서 휴전체제의 근간은 한미 동맹관계와 북미 적대관계이다.

먼저, 선생은 한미동맹관계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발상 때(1952.3)부터 1990년대 초까지를 5단계로 나누어 다루면서도 불평등 기조 위에서

33) 서보혁·나해집,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서울: 동연, 2016), pp. 34~42. 참조.

운영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1953년 11월 비준된 상호방위조약은 무력 북진통일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보증을 추구하는 이승만의 정치적 의도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할 ‘연루의 동맹 딜레마 (Alliance dilemma of entrapment)’를 한국 영토 사용권으로 상쇄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타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생은 그 결과 대한민국의 대미 예속구조가 법제화 되었다고 결론 내린다.³⁴⁾

종속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 작전통제권은 말할 것도 없고 무기 도입 협상,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범죄 처리 등에서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한국의 저자세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에 대한 성역화 된 한국인의 인식으로 인해 항상 한국에 불리하게 결정되어 왔다. 이에 관해 선생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한국(국민)의 생존보호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는 착각과 주둔비 분담률에서 이미 1982년에 미국 동맹국 가운데 최고의 영예를 수여받고 있는 현실 사이의 상관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라는 미 하원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했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선생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미국방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³⁵⁾

다음으로 북미관계를 논하면서 선생은 정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의학용어를 원용한 바 있다.³⁶⁾ 선생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미군의 매력적인 전쟁 훈련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미국 군대가 평시에도 전시를 상정한 전쟁훈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미 군부는 매년 한국에 35억 달러어치의 무기판매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 남한에는 41개의 미군기지

34)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173-192.

35) 리영희, 『자유인』 (파주: 2006, 한길사), pp. 213, 215-216.

36) 이하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58-80.

(1989.11.2. 현재)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나서 선생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사를 포기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격태도를 바꿀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선생은 미군의 군사전략과 미군 장성들의 발언을 분석한 뒤 부정적인 답을 내린다. 북한에 대한 미국 군부의 공격 의지는 북한의 핵시설 유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어 선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풀지 못한 원한’을 6·25전쟁에 승리 없이 비긴 것을 비롯해 9가지로 열거하고 이를 P.T.S.D. 증후군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북한측 역시 ‘조국통일전쟁’을 승리하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으로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역 P.T.S.D 증후군’ 환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선생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하고 양국간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조약 체결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선생은 좀 더 과감하게 한반도 위기의 주요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위 논문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1999년 논문에서 선생은 북미 미사일 대결 구도를 분석하고 이어 한반도에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역사적 전개를 논의한 뒤에 미국의 책임을 부각시킨다. 휴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장화 및 대북 핵·미사일 공격 계획 지속, 핵 불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독트린 채택 등을 지적한다. 그 논리의 연장으로 한반도 군사 위기의 해법도 미국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는다.³⁷⁾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리영희의 평화체제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광주민중학살로 집권한 전두환씨가 1982년 1월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이하 잠정협정안)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남북 통일의지 결집) 통일헌법 제정) 통일국가 수립을 골격으로 하는데, 거기에 분쟁의 평화적 해

37)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파주: 한길사, 2006), pp. 141~184.

결, 휴전체제 유지 및 군비경쟁 지양, 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 등 몇 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선생은 잠정협정안을 동서독 기본조약(1972.11.8 조인)과 비교 검토한다. 선생은 잠정협정안이 독일방식을 토대로 하거나 모방하려 할 때 거기에는 적지 않는 모순이 수반된다고 지적하면서 잠정협정안이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분단 고착화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사실 휴전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사항이 담긴 것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또 선생은 남북간에 평화조약의 체결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제5항(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을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하는 남한의 의사가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³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군비축소와 평화조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선생의 지론이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씨는 남북관계 개선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교차승인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 대해 리영희 선생은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대담(1988. 7.12)에서 7·7선언 그 자체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분단의 합법화를 위한 선언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한다. 선생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남북의 군사대결임을 전제하고, 현 휴전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선언이 효과를 갖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선언에 새 항목을 하나 추가해 7개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 군사대결 체제를 없애는 “40년 묵은 한국전쟁의 현 휴전협정을 협정 조인 당사자들에 의해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점을 제안한다. 선생은 평화조약의 내용으로 남북한 군

38) 리영희, 『역설의 변증』, pp. 55~103.

대와 군사비의 축소, 한반도에 있는 외국 기지와 핵무기의 철폐 등을 제안한다.³⁹⁾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제거하고 잠정적인 정전협정을 확고하고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것만이 한반도가 다시 동북아시아의 핵전쟁의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유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⁴⁰⁾ 그가 보기에 독일과 달리, 반도의 남북 사이에는 베를린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도, 제3국과 관련된 국경선 분쟁도 없는 훨씬 단순한 조건이다. 선생은 소련도 중국도 북한에 군대와 군사기지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평화조약 체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없는데, 단지 평화조약 체제가 될 때 불이익을 보게 되는 관계국은 미합중국이라고 말한다.⁴¹⁾ 선생은 미국이 평화조약에 응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제시해왔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주요 당사자인 남북미 사이 세 양자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조약 등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주류 연구자들과 달리 선생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군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군축과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과 같은 법제도적 합의는 허약하고 기만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리영희 선생은 광적인 반공·반북의식과 숭미사대의식과 같은 마음의 우상을 타파하고 평화주의 의식으로 전환할 것도 평화체제 수립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점을 덧붙여야 하겠다.

39) 리영희, 『자유인』, pp. 58-60.

40) 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p. 131.

41) 리영희, 『역설의 변증』, pp. 93-94.

IV. 통일사상

1. 통일의 조건

평생을 평화·군축연구에 헌신해온 리영희 선생은 통일문제 역시 평화주의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접근하였다. 무엇보다 통일이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등을 통한 신뢰구축과 전쟁 가능성 축소의 조건 속에서 평화적으로 추진할 것을 누차 강조하였다.

선생은 국가이익 중심의 국제관계가 활기를 띠던 1970년대에도 무력으로는 국익은 물론 통일도 어렵다는 점을 1,2차 세계대전시 프랑스의 구주 최강육군이나 마지노선도 프랑스를 구할 수 없었다는 교훈에서 도출해냈다. 그러면서 국방이나 안보 개념의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생존형식을 상호간에 모색하고 정립하지 않는 한 같은 민족의 군비경쟁은 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대국에 대한 경제·군사·정치적 의존상태를 영속화 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혈 없는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민족적 목표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⁴²⁾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인데, 선생은 그 주요 방안으로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시한다. 선생은 “평화조약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하지 않는 한 남북은 언제까지나 ‘전쟁 당사자’적 관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역설한다. 물론 전쟁 당사자 사이에 평화조약의 체결 없이 ‘공동선언’ 채택의 방식 등으로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있지만, 선생은 그런

⁴²⁾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pp. 285~286.

방법은 평화조약 체결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과도적·잠정적 합의로 그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또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본격화하려면 그 각 분야와 문제의 활동을 규정하는 많은 조약·협정·각서 등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수반되는데, 그것도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생은 강조하며 미·일, 중·일, 일·소 등 양자간 선례를 예시하기도 했다.⁴³⁾

선생은 또 주체적인 태도 역시 통일의 조건으로 거론했다. 궁극 목표인 통일에 앞서 우리 자신과 반도 내외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성을 갖고 초강대국들의 핵폭탄의 불세례를 불러들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은 군사우위사상과 군비경쟁열은 한국 사회의 체질적 군사화를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하면서 질적으로 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화해와 평화, 민족 차원에서는 대민족주의, 사회적 차원에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촉구했다.⁴⁴⁾

리영희 선생은 1994년 군을 대표해서 통일과정을 연구하는 기관의 유력인사와 토론회를 가졌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때 무엇보다 반가웠던 일은 그 연구기관이 그리는 이상적인 ‘통일된 국가의 상’이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힘 있고 건강한 국가”였다고 회고하며, 그것이 당신이 그리는 통일국가상과 일치한다고 기뻐했다. 다만, 선생은 ‘건강한’ 또는 ‘건전한’ 국가란 무엇보다도 평등·반예속·자주·자존·독립국가로 정의하면서, 그쪽의 해석은 통일 과정이나 통일 후에도 그 ‘통일국가’는 현재와 다름 없이 미국 군대의 기지여야 하고 미국군대가 그대로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생은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

43) 리영희, 『역설의 변증』, pp. 96~98.

44) 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pp. 292~293.

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회수한다는 것이 ‘작지한 건강한 통일국가’ 수립의 한 전제조건으로 꼽았다.⁴⁵⁾

선생은 또 민족정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도 통일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언급해왔다. 베를린 장벽 붕괴 10여일 후에 노태우 대통령과 폰 바이체커 대통령이 가진 한독 정상회담에서 생긴 일화를 소개하면서 통일의 조건을 제시했다. 베를린 장벽 후 한국인들에게도 ‘넓은 관념’, 특히 군사주의와 냉전사상에 변화를 기대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바이체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에는 정치범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바이체커 대통령은 “국민의 북한 왕래를 범죄 취급하지 마시오”라고 충고했다. 동독의 변화를 부러워한 노 대통령은 서독 지도자들에게 “북한이 동독 같았으면 남북한 문제가 잘 풀릴 텐데…”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생은 ‘동감’을 표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같은 논리로 “남한이 서독 같았으면 남북한 문제가 잘 풀릴 텐데…”라는 개탄 역시 진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선생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비판에 허심탄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독과 한국의 차이를 6가지로 열거하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반성과 독일의 교훈을 배울 것을 지적했다. 그 교훈은 첫째, 동서독과 달리, 남한은 친일 민족반역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해 국가의 덕성과 인격이 쌓지 못했고, 둘째, 서독은 남한과 달리, 동독을 ‘괴뢰’나 ‘반란집단’ 등으로 대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남한과 달리 서독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 있다. 셋째, 서독에서는 정부에 의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없다. 무슨 사상이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 정부가 주도하는 반공주의 교육이 팽배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넷째, 서독에

45)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 208.

는 군대는 있지만 군사사회가 아니라 평화·반전·반핵 지향적 사회다. 다섯째, 서독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근로대중들에게 고루 부를 분배하고 있다. 여섯째, 서독의 군사 주권은 어느 외국에 양도돼 있지 않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도 큰 발언권을 갖는다.⁴⁶⁾

2. 통일 방안

리영희 선생은 한반도 통일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민족공동체의 재현, 동북아 평화에 공헌, 제국주의 유산 청산, 2차 대전의 실질적 종결, 냉전체제의 실질적 종식, 비자주적 내적 역사 청산, 인류사회 공헌 및 민족 번영의 국가이념 설정 등 다각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알타협정 등 전후 14가지 분쟁처리방식을 비교 검토하면서 각각 통합과 분할,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 등 단일한 형태를 띠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어 선생은 남북한 모두 극단적 대결만 일삼아온 데 대한 자기비판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체제구조 결정론 및 광적 반공주의 비판,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인과관계의 구조 안에서 생각할 것, 남북한 이질화에 대한 균형적 이해 등을 촉구했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이 미국과 남한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는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선생은 통일방안으로 일종의 수렴형 통일론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변화하는 것만큼 남한도 인간다운 삶의 사회로 탈바꿈해야만 사람이 살 만한 가치 있는 통일국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46) 리영희, 『자유인』, pp. 224~226.

47) 리영희, 『스핑크스의 코』 (파주: 한길사, 2006), pp. 250~276.

리영희 선생의 수렴형 통일론은 장기간의 분단과 지속·강화된 군사적 대결을 배경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선생은 냉전 해체로 인해 '제로섬'적인 대결구도에 기반을 둔 냉전적 흡수통일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초 한소, 한중 수교가 남한에게 유리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지 도발을 준비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구소련과 중국은 독일 통일 경험을 묵도하면서 흡수통일 혹은 북한체제 붕괴가 초래할 역내 혼란을 우려해 흡수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의 판단이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패권주의, 중국과 소련의 시장경제화를 통한 대변혁과 북한의 내외적 불안요소 증대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요소들도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여기에 남한의 성공, 북한의 실패로 요약되는 남북한 동시 교차승인 구도의 미완성은 북한의 위협의식을 고조시켜 북한체제의 대내 결속과 주변 긴장고조를 초래할 가능성도 흡수통일의 비현실성과 평화정착을 우선한 점진적인 통일의 당위성을 말해주었다.

리영희 선생은 위와 같이 냉전 해체 이후 동북아 정세를 둘러본 뒤 통일 가능성과 통일 방안을 다음 두 단계로 전망한 바 있다. 통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5년 이내에 일정한 남북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일방적 점령·흡수가 아닌 바에야 정치적으로 무슨 용어를 쓰건 두 개의 국가가 연립하는 단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였다. 그렇지만 양측의 체제가 완전히 단일화되는 완전한 통일은 그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남북한의 공동 변화 없이는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기서 선생은 다시 수렴형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남한이 서독 수준으로 민주화되고 북한도

48)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pp. 270~272.

동독 정도로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상태대로 통일이 된다면 동서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⁴⁹⁾

흡수통일론과 함께 남한에서는 분단고착화를 방조하는 주의주장도 지속되어 왔다. 냉전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통일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전두환씨가 1982년 발표한 잠정협정안도 일종의 흡수통일 방안이라는 게 리영희 선생의 평가이다.⁵⁰⁾ 선생은 잠정협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동서독이 체결한 ‘기본조약을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본조약은 통일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독일 분단을 합법화하고, 통일은 상호합의에 의해서 거론될 필요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생은 잠정협정안이 기본적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의 틀을 원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동서독이 통일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른 길을 제시한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한민족이 통일된 단일 정치단위로서 내정을 관리하고 밖으로 자주독립의 실체와 노선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주변 열강은 반드시 통일 국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자주독립·완충적 기능을 견지하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분할의 발상이 생긴다. 셋째, 자주독립·완충 기능을 국제화 하는 중립화 통일 방안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선생은 이 세 측면을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논증하고 있다.

리영희는 이어 잠정협정안의 7개항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흡수통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제2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지만, 6·23선언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과 휴

49) 위의 책, p. 116.

50) 이하 『역설의 변증』, pp. 62~103.

전협정 언급 없이 이 조항을 제의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제4항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대목이다. 선생은 제4항이 잠정협정안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자 잠정협정안의 동기에서 목표까지 이 1개 항목에 압축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휴전체제가 존속되는 한 ‘군사적 대치상태’는 당연한 상황논리로서 지속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제4항은 실제 상황과 그 상황의 논리를 거꾸로 결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생은 또 제5항 ‘자유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가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가 빠진 것은 군사과학 지식의 유출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제6항 ‘쌍방의 기존 국제조약의 존중’은 통일 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조약들은 서로가 수정하거나 폐기·소멸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도리에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소상호원조조약, 조중상호원조조약, 그리고 남한의 작전지휘권 문제 등을 거론한다.

3. 통일 방향

리영희 선생이 밝힌 통일의 방향은 크게 두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의 방향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선생은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1987년에 출판한 『역설의 변증』의 한 논문에서 40년 만에 해빙하는 한반도의 냉전체제에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통일의 논리를 탐색한다.⁵¹⁾

선생은 위 논문에서 긴장완화 징후를 북한과 역내 안보정세에서 찾아내는데, 북한 내 징후로 1984년 1월 11일 3자회담 제안을 거론한다. 선생은 3자회담안이 랭군사태로 초래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일시적 책략이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향한 서방국가들과의 교류 및

51) 위의 책, pp. 19~54.

투자 유도를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신정책, ‘화해의 신호’로 해석한다. 선생은 또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외교의 피곤,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과 그에 유리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중국과 소련의 관계정상화 등과 같은 주변 요인들도 긴장완화의 징후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선생의 눈에는 그런 징후들로는 평화통일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위기구조를 평화구조로 대치할 제도와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과 주한 외국군대 주둔 문제 해결이 포함된다. 선생은 이 두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쟁 직후 제네바 고위급회담의 실패와 1970년대 유엔 총회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폐지 및 유엔사령부 해체 결의 통과 등을 평가하며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선생은 특히 6·25 이후 얼마 동안 통용되었던 주한미군의 전쟁역지 역할론은 북한의 공격가능성과 능력, 그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동조가능성 등을 냉철히 평가해볼 때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선생은 이어 평화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통일의 형식과 형태, 분단국가 정부의 유일 합법성 문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주체, 상호승인·교차승인·유엔동시가입 등을 다루고 있다. 거기서 선생은 1982년 1월 남한정부의 잠정협정안을 정전체제, 곧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고, 1984년 1월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은 북미 평화조약 체결 >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 남북 통일회담 등 단계적인 접근인데 남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생은 평화통일 논의에서 남한이 북한과 대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한미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남한은 평화체제 관련 입장이 북한에 비해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민족 차원의 평화통일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은 분단과 적대를 정당화 해온 일련의 허구의식 타파와 균형된 감각을 강조한다.⁵²⁾ 리

영희 선생이 평생을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 문제를 궁구하면서 일관되게 견지한 자세가 ‘실사구시’였다. 선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고 강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상에 도전하는 고통을 무릅써야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선생이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며 광적인 극우·반공주의⁵³⁾의 허구의식에 도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선생은 또 맹목적·감정적 애국심도 대표적인 허구의식으로 지목하고, 베트남 전쟁 관련 미국 행정부의 잇달은 거짓에 대한 〈뉴욕타임스〉, 〈와싱턴포스트〉의 비판 기사를 언급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지식인의 책무를 이렇게 강조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집단이 국민을 속이고 전쟁을 계속하는 배신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지식으로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반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애국이다. ... 소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국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밖에 아닌 것을 국가이익이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파렴치하고 잘못된 관념은 전부 반애국적인 것이다.⁵⁴⁾

리영희 선생은 또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통일의 대상인 북한(문제)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가령, 베트남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인 1970년대 초 닉슨독트린으로 미국이 한국의 협의 없이 주한

52) 이하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pp. 306-344.

53) 선생은 광적인 극우·반공주의를 “남북한이 관련됐거나 남북한이 당사자일 경우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인과관계로 일어난 것인가 따위의 지성적인 사실 인식의 노력은 접어두고, 무조건 처음부터 조건반사적으로 북한측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려버리는 정신적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책, p. 306.

54) 위의 책, p. 314. 리영희 선생의 지식인론에 대해서는 이대근, “다시, 지식인의 책무를 묻다,” 홍세화·고병권 외, 『리영희 프리즘』, pp. 126-145 참조.

미군 일부를 철수하자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한 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1980년대 후반 소련이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자 북한도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균형된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선생이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한 것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선생은 위 사례를 통해 남북한이 상대방을 쥐구멍으로 몰아넣는 식의 군사적 압박이나 안전에 대한 공포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선생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반공·반북시각에 물들어 있는 주의주장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은폐된 사실을 발굴하거나, 편향된 주장을 균형 있게 교정하거나, 일반화의 오류를 새로운 사실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생은 미국이 소련과 동구국가들, 즉 백인종 국가들에게는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그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고, 1990년대 초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핵사찰도 거부하는 국가가 28개국이나 되었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를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대규모 고강도 훈련이 냉전시절 유럽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쟁광 북한’의 핵개발론을 회의하였고 북한의 남침위협론을 남북한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했던 것이다.

선생은 위와 같은 비판적 독해와 실증을 통한 각종 허위의식 폭로에 그치지 않고, 평화통일론에 적합한 시각으로 이중잣대를 거두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 역사에서 배우는 자세, 상생하는 균형적인 접근 등을 제안한다. 가령, 핵무기를 포함해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동서독에 집중해있었기 때문에 핵전쟁의 위협도 동서독에 더 많이 있었는데도 서독 정부의 사회복지비는 대체로 군사비의 2배였고, 우리는 군사비가 평균 4배, 상대적으로 말하면 남한의 복지예산은 군사예산의 1/8이었던

사실 앞에서 성찰하고 변화할 것을 제안하는 식이다.

V. 맺는말

리영희 선생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부터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시대의 요구를 대변해온 실천적인 지식인이자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선생은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식민주의, 국가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 등을 배격하고 대신 진실, 자유, 이성, 인권, 진실을 추구하며 사회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평화구축에 진력해왔다. 리영희 선생은 진정한 평화주의자였던 것이다.

선생의 평화사상은 사변과 거리가 먼 대신 언제나 민족과 민중의 고난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그려온 것이었다. 좁은 의미에서 선생의 평화사상은 반핵 평화주의론, 동아시아 분단체제론, 한반도 평화체제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생의 반핵 평화주의론은 군수용·민수용을 막론하고 핵 일반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정전체제와 동아시아 분단체제 하에서 핵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비핵국가(특히 북한)에 대한 핵공격 독트린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선생은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의 핵개발 과정도 그런 구도 하에서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핵발전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평화를 국제적 차원(국가안보)은 물론 사회적 차원(국민안전)에서 볼 때 선생의 반핵 평화주의론은 더욱 주목을 받을 가치가 크다 하겠다. 또 선생의 반핵 평화주의론은 핵전쟁 위험까지 거론되는 목하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핵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목표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미국의

구속력 있는 대북 안전보장의 동시이행 구도 만들기가 절실함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언론의 분발이 요청되는데 선생의 ‘사무삼과(四無三過)’론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한편,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은 선생의 논지로는 동아시아 냉전구조에 다름 아니다. 이 개념은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가 공산진영의 대륙권과 자유진영의 해양권으로 대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휴전·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선생은 냉전시기 동아시아 역내 갈등이 냉전 해체 이후 약화되기는커녕 지속되고 있는 점을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 특히 위계적인 한미일 안보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찾고 있다. 선생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숭미사대의식을 주입해 국가안보를 미명으로 정권안보를 추구해왔다고 비판한다. 선생의 동아시아 분단체제론은 한미일 3국을 위시한 국제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주는 동시에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이 역내 평화구축에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이상 두 차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선생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을 탐색하고 있는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균축을 제안하고 있다. 선생은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한국에게는 종속적인 한미동맹관계의 개혁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이 난망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선생의 이론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은 기득권 구조로 굳어진 기존 휴전·분단체제와 갈등을 수반할 것임을 예고해준다 할 것이다. 가령, 국내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해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선후 혹은 선택의 문제로 파악하는 자세는 평화체제 구축과는 멀어 보인다. 또 한미동맹관계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설정해놓고 평화체제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반도 문제의 원심력이 커진 오늘날 평화와 통일 모두에 있어 구심력, 곧 남북한 협력을 복원할 필요

성이 선생의 지론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

둘째, 선생의 통일사상은 (좁은 의미의) 평화사상에 비해서는 그 내용과 체계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국가의 상과 그 경로를 뚜렷하게 제시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선생은 통일의 조건으로 평화조약 체결, 자주적 태도, 민주주의 공고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개론 수준에서 통일 방안으로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평화공존 하에 남북연합을 거친 후 점진적인 수렴형 통일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의 방향으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민족(남북) 차원에서는 군축을 비롯해 적대와 분열을 조장하는 각종 허위의식 타파, 성찰 및 상호존중의 자세를 촉구한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선생의 통일사상은 평화사상과 일부 중첩되면서 통일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관계임을 웅변하고 있다.

리영희 선생의 통일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 북한 및 분단문제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존중과 공존의 자세로써 서로 닮아가는 통일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북한을 악마시하고 그를 통해 한국사회의 치부와 약점을 은폐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군사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온존시키는 자세에 다름 아니다. 대북 적대의식에 기반한 강경정책이 낳은 결과는 오늘날 북핵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긴장구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리영희 선생이 당신의 평화사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체론적인 시각을 취하고 거시와 미시의 연구방법을 결합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선생이 추구한 진실을 찾아가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평화를 궁구하는 후학들이 본받을 연구 자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준만 편저. 『리영희: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서울: 개마고원, 2004.
- 고병권·구갑우 외. 『리영희를 함께 읽다』. 파주: 창비, 2017.
- 김삼웅. 『리영희 평전』. 서울: 책보세, 2010.
- 리영희. “핵무기 신앙에서의 해방.” 리영희·임재경 편. 『반핵: 핵위기의 구조와 한
반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8.
-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분단을 넘어서』. 서울: 한길사, 1984.
-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스핑크스의 코』.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역설의 변증』.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역정: 나의 청년시대』.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자유인』.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파주: 한길사, 2006.
- 리영희. 『80년대 국제정세와 한반도』. 파주: 2006, 한길사.
- 리영희. 대담 임현영.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파주: 한길사, 2005.
- 백원담.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화과학사, 2013.
- 서보혁·나해집.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서울: 동연, 2016.
-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공동체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제
2호 (2006).
-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 파주: 한
길사, 2009.
- 정영신. “동아시아 분단체제와 안보분업구조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94권
(2012).
- 홍세화·고병권 외. 『리영희 프리즘』. 파주: 사계절, 2010.

The Anti-War and Anti-Nuclear Peace Thought of the Late Lee Young Hee

Suh Bo-hyuk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late Lee Young Hee, a principled journalist and scholar, is one of sages who represent Korea society. This paper is to reflect his life and sayings and draw out their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acifism. His pacifist thought is consisted of a series of theories such as anti-nuclear pacifism, division system in East Asia, and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He had proposed the transformation of armistice into peace system and disarmament among parties concerned not only as a way for building peace on the peninsula, but also as a core in realizing peace in East Asia. And, the late Mr. Lee demonstrated that peace on the peninsula is holistic in the sense that the peace include positive aspect as well as negative one by addressing peace treaty, independent viewpoint,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as a precondition of Korean reunification.

Key words: Lee Young Hee, Anti-nuclear war, Division system, Peace system, Reunification, Alliance.

서보혁(Suh, Bo-hyuk)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북한연구학회 연구이사,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최근 저서로 『배반당한 평화』, 『평화학과 평화운동』, 『분단폭력』,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등이 있다.